

보도시점 (지 면) 2. 25.(화) 조간
(인터넷) 2. 24.(월) 12:00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 대비,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지원

-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2.25~3.25)
- 15개 내외 공급망, 600개 이상 중소기업에 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상담(컨설팅) 및 대·중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율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5일(화)부터 3월 2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기업의 범위는 ‘27년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조치하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위반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과징금(매출액 최대 5%)이 부과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응하여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사업과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사업을 통합공고한다.

먼저,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 사업(‘25년 30억원)이다. 선정된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통해 원청기업에서 제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지표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공급망 내에서 자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상담(컨설팅), 인증획득 등 심층 진단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민·관 공동 전략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 과제 지원사업('25년 20억원)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필요에 따라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검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시,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다.

2개 사업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기업 등 대기업 설명회, 프로젝트 선정 중소기업을 추가 심사하여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및 정책자금 융자 등 후속 연계할 계획이다.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 프로젝트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플랫폼(www.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www.esg.winwingrowth.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책임자	단 장	박승록 (044-204-7250)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246)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철일 (044-204-7920)
		담당자	사무관	정지수 (044-204-7921)
전담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종화 (055-751-9841)
		담당자	대 리	박병관 (055-751-9524)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부	책임자	부 장	한창훈 (02-368-8864)
		담당자	과 장	김광덕 (02-368-8425)



□ 사업목적

- 협력 중소기업에 지속가능경영 수준 진단 등을 제공하여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27.7월~) 대비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점검지원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기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

□ 사업개요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탄소중립 기본법」 제4조, 제55조 등

- (지원규모) 3,000백만원

- (지원대상) '27.7월부터 시행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외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 국내 EU 수출액 15억 유로 초과(50여개), EU 매출액 15억 유로 및 직원수 5천명 초과

- (지원내용) 진단지표 개발(3억원), ESG 통합플랫폼 확대·개편(3억원), 공급망 내 자가·심층 진단(20억원), 협력사 인증 교육(2억원)

- (진단지표 개발) 석유화학, 철강 등 원청기업의 주력업종을 고려한 공급망별 맞춤형 지속가능 경영수준 진단지표 개발 (300백만원)

- (ESG 통합플랫폼) 원청기업의 매출, 부가세 등 자료를 활용한 가치사슬 DB 구축 및 공급망별 지속가능경영 진단지표 탑재 (300백만원)

- (자가·심층 진단) ESG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자가 진단 및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진단 (기업당 3.3백만원, 600개사)

- (인증 교육) 협력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서 제안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집체 교육 (200백만원)

□ 사업목적

-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 규제가 확산됨에 따라 수출 대기업의 공급망 內 협력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 다수의 기업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들이 지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중견 기업의 ESG 이니셔티브에 맞는 역량의 점진적 제고

□ 사업개요

- (지원기간) 공고일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 (지원규모) 20억(정부보조금 10억 + 상생협력기금 10억)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과 상생협력기금 1:1 매칭
- (지원대상)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
- (지원내용) 국내외 ESG 요구사항 대응 및 공급망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ESG 활동 전반
 - 지원유형 내 다양한 사업 내용을 구성하여 자율 과제로 참여

< 지원 과제 >

- (국내외 ESG 규제 대응) ① EU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② 공급망 온실가스 측정정 지원, ③ 공급망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 (고객사 ESG 요구 대응) ④ 공급망 ESG 이니셔티브 지원, ⑤ 거래기업 ESG 구매정책 대응 지원
- (공급망 ESG 심화지원) ⑥ ESG 정보공시 지원 ⑦ 공급망 ESG역량 강화
- (기타 공급망 ESG 전반) ⑧ 협력 중소기업 공급망 ESG 활동 전반에 걸쳐 자율 구성